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황병헌

I. 권리행사방해범죄 개관

1. 강요범죄

가. 의의 및 보호법익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실행의 자유로, 협박(의사결정의 자유), 약취·유인(행동의 자유), 체포·감금(행동의 자유)과 함께 개인적·인격적 법익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죄임
-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서는 강요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기본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유에 관한 죄인 강요죄를 재산죄인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론도 있음

나. 유사 범죄유형과의 비교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개인의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공갈죄 등과 비슷한 구조를 가짐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강요죄와 유사하나,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강요의 수단이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

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강요죄와 구별됨

2.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 · 강제집행면탈범죄

가. 의의 및 보호법익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점유강취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범죄,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임
-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으로서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제한물권 또는 채권, 점유강취죄는 자유권과 제한물권,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각 보호하기 위한 범죄임
- 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는 영득죄가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음

나. 유사 범죄유형과의 비교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재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범죄인 점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 손괴, 은닉하는 절도죄, 손괴죄와 구별됨
- 점유강취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 물건을 강취하는 범죄로서 강도죄에 대응하는 범죄임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형법 제142조)는 공무소의 명령을 받아 타인의 간수하는 자기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권의 보호보다 공무방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구별됨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강요범죄

■ 형법상의 강요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324	강요	5년 ↓
§ 324의2	인질강요	3년 ↑
§ 324의3	인질상해 · 치상	무기, 5년 ↑
§ 324의4	인질살해	사형, 무기
	인질치사	무기, 10년 ↑
§ 324의5	§ 324 내지 § 324의4 의 미수범	
§ 326	중강요 ¹⁾	10년 ↓

■ 폭처법상의 강요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2 ②	공동강요 등	7년 6월 ↓
§ 2 ① 2호	상습강요 등	2년 ↑
§ 2 ③	누범강요 등	2년 ↑
§ 3 ①	특수강요 등	2년 ↑
§ 3 ③ 2호	상습 · 특수강요 등	3년 ↑
§ 3 ④	누범 · 특수강요 등	3년 ↑

■ 강요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기타 범죄

1) 강요죄와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조)가 있는데, 통설은 강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강요죄,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권리행사방해죄로 칭하고 있으므로{주석 형법 각칙 (5)}, 이에 따름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²⁾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2호³⁾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알선영업행위 등),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⁴⁾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⁵⁾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자목, 제7조, 제2조 제4호 자목, 제60조⁶⁾

2)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4)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자.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⁷⁾
- 경비업법 제29조⁸⁾
- 항공법 제166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⁹⁾

나.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 · 강제집행면탈범죄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 ·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 325 ①	점유강취	7년 ↓
§ 325 ②	준점유강취	7년 ↓
§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
§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 권리행사방해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기타 범죄

-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¹⁰⁾,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무효죄)¹¹⁾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항¹²⁾

7)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형의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제14조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9) 제166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강요범죄

■ 형법상 강요죄, 폭처범위반죄 ⇒ 포함

- 강요범죄의 기본·가중 구성요건이고 발생빈도도 비교적 높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형법상 강요미수죄 ⇒ 제외

- 살인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에서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제외함이 타당

■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 인질치사 ⇒ 제외

- 이미 살인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군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제외함이 타당

■ 형법상 중강요죄 ⇒ 포함

- 실무상 처벌 사례가 드물기는 하나, 강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강요죄의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이므로 이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만 포함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의 범행은 아직까지 사례가 매우 드물기는 하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형법상 강요의 특별구성요건으로 그 보호법익, 범죄의 성격, 행위태양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형법상의 강요와 동일한 유형에 포섭시켜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음
- 다른 범죄들은 이미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제외함이 타당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포함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2014. 3. 31. 개최된 제5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해당 관련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같은 법 제60조의 강요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와 같은 이유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강요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기타 범죄 ⇒ 제외

- 형법상의 강요죄와 그 보호법익, 가벌성, 범죄의 성격 및 행위태양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아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나.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범죄

■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 ⇒ 포함

- 형법 제2편 제37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들로 발생빈도도 높음

■ 형법상 중권리행사방해죄 ⇒ 포함

- 중강요죄 부분과 같은 이유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형법 제140조의2), 공무상보관물무효(형법 제142조) ⇒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로,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대상범죄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과 구별되

고, 실무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권리행사방해의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범죄의 성격, 행위태양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으나, 형법이 개인의 재산권적 측면보다는 공무방해 측면에 중점을 두어 공무집행방해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의 유사성을 이유로 다른 장에 규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함께 설정할 경우 양형기준 적용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함이 타당

■ 권리행사방해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기타 범죄들 ⇒ 제외

- 형법상의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과 그 보호법익, 가벌성, 범죄의 성격 및 행위태양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아 동일한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

III.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유사 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 폭행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 협박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 체포·감금범죄 - 일반적 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3. 양형자료조사 결과

가. 강요범죄

■ 선고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강요	수	8	36	44
	비율	18.2	81.8	100.0
폭처법(공동강요)	수	8	41	49
	비율	16.3	83.7	100.0
폭처법(집단·흥기등강요)	수	2	18	20
	비율	10.0	90.0	100.0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강요	수	1	2	10	4	17	3	0	4	3	0	0	0	0	0	44	6.14
	비율	2.3	4.5	22.7	9.1	38.6	6.8	0.0	9.1	6.8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공동강요)	수	1	1	11	1	18	12	0	2	2	0	0	1	0	0	49	6.53
	비율	2.0	2.0	22.4	2.0	36.7	24.5	0.0	4.1	4.1	0.0	0.0	2.0	0.0	0.0	100.0	
폭처법 (집단·흥기등강요)	수	0	0	0	0	0	0	0	10	7	1	0	1	1	0	20	12.05
	비율	0.0	0.0	0.0	0.0	0.0	0.0	0.0	50.0	35.0	5.0	0.0	5.0	5.0	0.0	100.0	

나.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 범죄

■ 선고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권리행사방해	수	37	148	185
	비율	20.0	80.0	100.0
강제집행면탈	수	31	164	195
	비율	15.9	84.1	100.0

■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권리행사방해	수	0	0	33	1	85	44	1	8	11	0	0	0	1	1	185	6.89
	비율	0.0	0.0	17.8	0.5	45.9	23.8	0.5	4.3	5.9	0.0	0.0	0.0	0.5	0.5	100.0	
강제집행면탈	수	0	0	23	2	87	44	0	19	18	0	1	1	0	0	195	7.26
	비율	0.0	0.0	11.8	1.0	44.6	22.6	0.0	9.7	9.2	0.0	0.5	0.5	0.0	0.0	100.0	

4. 유형분류 방안

가. 대유형 분류

1) 제1안 : 강요 / 권리행사방해 등

- 보호법익에 따라 자유에 관한 죄인 강요와 재산권에 관한 죄인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 · 강제집행면탈을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

2) 제2안 : 강요 /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 / 강제집행면탈

-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되, 구성요건의 성격이 다소 이질적인 강제집행면탈을 제3의 대유형으로 분류

3) 검토의견 ⇒ 제1안

- 강제집행면탈의 구성요건이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와 다소 이질적이기는 하나, 보호법익이 유사하고 실무상 양형 분포가 권리행사방해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하나의 대유형으로 포섭하되 개별 구성요건은 중소유형으로 세분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나. 중소유형 분류

1) 강요 유형

■ 일반강요 / 중강요 / 상습·누범·특수 강요의 구분

- 중강요는 실무상 사례가 드물기는 하나, 법정형이 10년 이하인 중강요를 법정형이 5년 이하인 일반강요 유형에 포섭할 경우 적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움
- 상습·누범·특수강요는 행위태양 및 수단(집단, 흉기휴대 등의 결합 여부), 상습성 및 누범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가벌성의 차이가 큼

■ 폭처법상 공동강요 ⇒ 일반강요 유형에 포함

- 폭처법상 폭력범죄의 다른 양형기준(체포·감금, 상해, 협박, 폭행, 공갈)과 마찬가지로 일반강요 유형에 포섭
- 다만 ‘2인 이상 공동’을 일반가중양형인자로 반영

■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강요 및 상습특수·누범특수강요 ⇒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

- 상습특수·누범특수 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형량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법정형의 차이(1년)도 그다지 크지 않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 일반강요 유형에 포함

- 선례가 많지 않고, 형법상의 기본 강요죄와 행위 객체만 다르고 행위태양을 일부 행위로 특정해 놓았을 뿐임
- 다만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특별가중양형인자로 반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자목,

제7조, 제2조 제4호 자목 ⇒ 일반강요 유형에 포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체계 등에 비추어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강요죄의 특별가중양형인자로 보는 것이 적정함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음

■ 검토결과에 따른 범죄유형 분류

유형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일반강요	강요	형법 § 324	5년 ↓
		공동 강요	폭처법 § 2 ②	7년 6월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아청법 § 16	7년 ↓
2	중강요	중강요	형법 § 326	10년 ↓
3	상습·누범·특수 강요	상습·특수·누범 강요	폭처법 § 2조 ①, § 2조 ③, § 3조 ①	2년 ↑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폭처법 § 3 ③, § 3 ④	3년 ↑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 제1안 : 권리행사방해 / 점유강취 / 강제집행면탈

■ 제2안 : 피해액 규모, 취거·은닉·손괴한 물건 가액 기준 분류

■ 검토의견 ⇒ 제1안

- 각 범죄별 유형특징, 구성요건상의 공통성, 죄질, 행위태양, 법정형 등을 반영한 분류 방안임
- 정확한 피해액 규모나 물건의 가액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위 가액의 다과와 형의 경중이 반드시 비례하지도 않으며, 위험범인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격상 가액을 세분화하여 유형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2안은 채택하기 어려움

- 중권리행사방해는 중강요와 달리 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법정형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실무상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점유강취의 유형에 포함시키되, 특별가중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검토 결과에 따른 범죄유형 분류

유형	구 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323	5년 ↓
2	점유강취 / 준점유강취	점유강취	§ 325 ①	7년 ↓
		준점유강취	§ 325 ②	7년 ↓
		중권리행사방해	§ 326	10년 ↓
3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 327	3년 ↓

IV. 형량범위

1. 강요 유형

가. 유사 범죄군의 형량범위

■ 폭행 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 협박 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 체포·감금 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 상해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나. 일반강요

1) 법정형 비교

강요 (형법 § 324)	공동강요 (폭처법 § 2 ②) ¹³⁾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아청법 § 16, 아동학대법 § 60)	
5년 이하	7년6월 이하	7년 이하	
폭행 (형법 § 260 ①)	협박 (형법 § 283 ①)	체포 · 감금 (형법 § 276 ①)	상해 (형법 § 257 ①)
2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2) 형량의 분포

단위: 명, %

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강요	수	1	2	10	4	17	3	0	4	3	0	0	0	0	0	44	6.14	
	비율	2.3	4.5	22.7	9.1	38.6	6.8	0.0	9.1	6.8	0.0	0.0	0.0	0.0	0.0	100.0		
폭처법 (공동강요)	수	1	1	11	1	18	12	0	2	2	0	0	1	0	0	49	6.53	
	비율	2.0	2.0	22.4	2.0	36.7	24.5	0.0	4.1	4.1	0.0	0.0	2.0	0.0	0.0	100.0		

3) 형량범위의 설정

- ▣ 형량 분포는 강요죄는 4월, 6월이 60% 이상, 공동강요죄는 4월, 6월 및 8월이 80% 이상을 각 차지하고 있음

1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상습강요, 신고의무자의 강요(제6조, 제7조)에 대한 법정형도 같음

■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나, 폭행 · 협박죄 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으므로 폭행 · 협박죄에 대한 형량범위보다는 높게 설정함이 타당함

■ 같은 ‘자유에 대한 죄’로서 법정형이 동일한 체포 · 감금죄에 대하여 설정된 형량범위를 검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 관련

●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는 2013. 6. 19.부터 시행되었고,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0조는 2014. 9. 29. 시행되어 아직 실제 선고 사례는 희소함

● 법정형의 상한(7년)이 공동강요(7년 6월)보다 낮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가능함

● 그러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위한 형량 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가 일단 종료된 후 사법절차의 왜곡을 목적으로 별도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형량범위 검토

● 제1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체포 · 감금죄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 및 하한을 상향 조정

- 분석 사례 중 강요죄의 61.3%, 공동강요죄의 69.4%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 제2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 6월	4월 - 1년	8월 - 1년6월

- 분석 사례 중 22.7%를 점하는 징역 4월을 기본영역의 하한으로 정하고, 아울러 기본·감경영역의 형량범위를 체포·감금죄보다 낮게 설정하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은 체포·감금죄와 동일하게 설정
- 분석 사례 중 강요죄의 93.1%, 공동강요죄의 93.8%가 기본영역에 포섭됨

● 검토의견 ⇒ 제1안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범죄를 일반·특별가중양형인자로 반영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분석 사례 중 기본영역에 포섭되는 비율이 다소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영역에 포섭되지 않는 징역 4월이 선고된 사안은 대부분 감경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다. 중강요

- 실제 선고 사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양형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 논의는 불가능함
- 중강요(§ 326, 10년 이하의 징역)는 강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에 대한 위험을 발생' 하게 하는 범죄로, 형법상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 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범죄로는 중상해죄(형법 § 258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중유기죄(형법 § 271 ③, 7년 이하의 징역)가 있음

■ 형량범위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강요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 중상해죄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점, 기본범죄의 법정형도 강요죄가 상해죄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중상해보다 다소 가볍게 설정하는 방안임

라. 상습 · 누범 · 특수 강요

1) 법정형 비교

상습누범특수 강요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상습누범특수 폭행	상습누범특수 협박
상습강요(폭처법 §2 ①) 누범강요(폭처법 §2 ③) 특수강요(폭처법 §3 ①)	상습체포감금(폭처법 §2 ①) 누범체포감금(폭처법 §2 ③) 특수체포감금(폭처법 §3 ①)	상습폭행(폭처법 §2 ①) 누범폭행(폭처법 §2 ③) 특수폭행(폭처법 §3 ①)	상습협박(폭처법 §2 ①) 누범협박(폭처법 §2 ③) 특수협박(폭처법 §3 ①)
2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상습특수강요(폭처법 §3 ③) 누범특수강요(폭처법 §3 ④)	상습특수체포감금(폭처법 §3 ③) 누범특수체포감금(폭처법 §3 ④)	상습특수폭행(폭처법 §3 ③) 누범특수폭행(폭처법 §3 ④)	상습특수협박(폭처법 §3 ③) 누범특수협박(폭처법 §3 ④)
3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2) 형량의 분포

단위: 명, %

직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폭처범 (집단·흥기등강 요)	수	0	0	0	0	0	0	0	10	7	1	0	1	1	0	20	12.05
	비율	0.0	0.0	0.0	0.0	0.0	0.0	0.0	50.0	35.0	5.0	0.0	5.0	5.0	0.0	100.0	

3) 형량범위의 설정

- 법정형이 상습·누범·특수 폭행 및 협박보다는 높고, 상습·누범·특수 상해보다는 낮으므로 형량범위도 그에 상응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양형사례는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부분 포함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처벌조항 및 법정형이 같고 보호법익이 유사한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제1안 : 상습·특수·누범 체포·감금죄와 동일하게 설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 강요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 상습·특수·누범 체포·감금죄와 다른 형량범위를 설정할 경우 균형에 맞지 않음
- 실무상 법정형의 하한(2년)에서 작량감경 한 1년 또는 그보다 낮은 10월의 형이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징역 1년의 형은 기본영역에 포섭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제2안 : 상습·특수·누범 체포·감금죄를 기준으로 하되 감경영역의 하한과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 조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 강요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 제1안과 같은 이유로 기본영역은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죄와 동일하게 설정함
- 감경영역의 하한은 실제 선고 사례 중 가장 낮은 형과 같은 징역 10월로 정함
- 가중영역은 불법성이 큰 사안에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상한도 상향 조정하여 형량구간을 넓힘

● 제3안 : 상습·누범·특수 상해죄보다는 낮게 설정하되, 제1안보다는 각 영역의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상습·누범·특수 강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			

-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지정문화재절도, 일반건조물 등 방화에 대한 형량구간을 참조함
- 법정형이 2년 또는 3년 이상인 범죄의 기본영역 하한은 대부분 법정형 하한을 작량감경 한 형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하한을 징역 1년6월로 설정하고, 기본영역의 상한은 징역 3년으로 정함¹⁴⁾
- 가중영역의 하한은 상습·누범·특수 강요의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징역 2년6월로 설정
- 실무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징역 10월을 감경영역에 포섭할

14) 기본영역의 상한이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의 법정형 하한과 같은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상습특수·누범특수 강요는 실무상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가중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수 있도록 감경영역의 하한은 징역 10월로 정함

● 검토 ⇒ 제3안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가. 유사 범죄군의 형량범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2) 강도 -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3)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3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나. 권리행사방해

1) 법정형 비교

권리행사방해(§ 323)	절도(§ 329)	재물손괴(§ 366)
5년 이하	6년 이하	3년 이하

2) 형량의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권리행사방해	수	0	0	33	1	85	44	1	8	11	0	0	0	1	1	185	6.89
	비율	0.0	0.0	17.8	0.5	45.9	23.8	0.5	4.3	5.9	0.0	0.0	0.0	0.5	0.5	100.0	

3) 형량범위의 설정

- 양형 통계상 4월, 6월 및 8월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경합범이 아닌 경우 10월, 12월이 가장 중한 처벌 사례로 보임
- 자기의 물건에 대한 절도와 손괴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보다 비난가능성이 작고, 법정형도 절도죄보다 낮으므로 형량범위를 절도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손괴죄의 법정형 상한이 3년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형량범위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 기본·감경영역을 일반절도의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게 설정
- 다만 절도범죄와 달리 범행대상·방법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

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은 다소 높게 설정

다.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1) 법정형 비교

점유강취/준점유강취 (§ 325 ① ②)	중권리행사방해 (§ 326)	강도(§ 333) 준강도(§ 335)	상해(§ 257 ①)	중상해(§ 258 ①)	공용물무효 (§ 141 ①)
7년 이하	10년 이하	3년 이상	7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	7년 이하

2) 선고형량의 검토

- 점유강취죄는 선고 사례가 매우 드물고, 준점유강취죄 및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선고 사례를 발견할 수조차 없어 양형통계를 기초로 한 형량범위 설정 논의는 불가능함

3) 형량범위의 설정

-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강도죄 및 준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법정형이 하한만 규정되어 있어 형량범위 설정에 직접 참조하기는 어려움
-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중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구성요건상 공통점이 있고, 법정형이 유사한 중상해죄의 형량범위를 참조할 수 있음
- 형량범위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점유강취 / 준점유강취	4월 - 1년2월	8월 - 2년	1년4월 - 3년

- 중권리행사방해죄는 중상해와 달리 법정형 하한이 없는 점, 기본

범죄의 법정형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중상해죄보다 다소 낮게 설정하는 방안임

- 중상해죄와 동일하게 정할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인 권리행사방해를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함
- 다만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라. 강제집행면탈

1) 법정형 비교

강제집행면탈(§ 327)	손괴(§ 366)	공무집행방해(§ 13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40의2)
3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

2) 형량의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9	10	12	15	16	18	24	30		
강제집행면탈	수	0	0	23	2	87	44	0	19	18	0	1	1	0	0	195	7.26
	비율	0.0	0.0	11.8	1.0	44.6	22.6	0.0	9.7	9.2	0.0	0.5	0.5	0.0	0.0	100.0	

3) 형량범위의 설정

- 선고 형량은 4월, 6월 및 8월이 77%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이고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임에도, 실제 권리행사방해죄의 평균형량이 6.89월인 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평균형량이 7.26월로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음
- 권리행사방해가 취거 · 은닉 · 손괴 등 사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반면, 강제집행면탈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 법률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능적·계획적 범죄가 다수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행위속성상 유사점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도 참조할 수 있음

■ 형량범위 검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3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 권리행사방해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권리행사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중구간은 다소 낮게 설정

3. 검토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가. 강요유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5년 ↓ / 7년6월 ↓ / 7년 ↓	-8월	6월-1년	10월-2년
2	중강요	10년 ↓	4월-1년2월	8월-2년	1년4월-3년
3	상습·누범·특수 강요	2년 ↑ / 3년 ↑	10월-2년	1년6월-3년	2년6월-5년

나.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유형	구 분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	권리행사방해	5년 ↓	-8월	6월-1년	10월-2년6월
2	점유강취/준점유강취	7년 ↓ / 10년 ↓	4월-1년2월	8월-2년	1년4월-3년
3	강제집행면탈	3년 ↓	-8월	6월-1년	8월-2년

V. 양형인자

1. 강요 유형

가.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를 추출함
- 유사한 범죄군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 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을 참조함
- 참고 : 체포·감금범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상습체포·감금 또는 누범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나.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종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3유형 중 상습·누범 강요 유형은 제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	---

1) 특별감경요소(행위자/기타) 및 일반감경·가중요소(행위 및 행위자/기타)

■ 체포·감금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 유사 범죄군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도 거의 유사함

■ 폭처법상 공동강요는 유사 범죄군과 같이 일반가중요소로 반영

2) 특별감경요소(행위)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에서 위 인자를 특별감경요소로 규정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 규정
- 일반강요는 기본영역의 최저 형량이 6월이므로, 폭행·협박의 정도 또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에 포함시킴으로써 실무상 비중이 적지 않은 징역 6월 미만의 형을 감경영역에 적절히 포섭할 수 있음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유사 범죄군의 정의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

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음
- 유사 범죄군과 마찬가지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함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범죄 양형기준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요 범죄에 나아간 경우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특별가중요소(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모두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있음
- 폭력범죄 양형기준,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상습·누범·특수 범죄는 위 양형인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은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
-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은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음
- 강요 범죄에 있어서는 채팅 등으로 알게 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례 등이 존재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있고, 이는 형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특별가중요

소로 반영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체포·감금 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있음
- 강요 범죄에 있어서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가중구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함
 - 실무상 나체사진의 전송이나 탈의를 강요하는 등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저해하고 제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점에 비추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양형인자의 정의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강요)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가중요소로 규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함

- 체포·감금죄 양형기준에서는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강요범죄의 경우 폭력조직의 조직원 등이 잔혹한 폭행·협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교도소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극도의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등이 상당수 발견됨
- 양형인자의 정의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양형기준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
- 실무상 13~14세의 여자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 범죄가 발견됨

4) 특별가중요소(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3유형 중 상습·누범 강요 유형은 제외)

- 폭력범죄, 체포·감금범죄 모두 동종 누범을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3유형 중 상습강요, 누범강요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높게 설정하였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 규정
- 이는 체포·감금 범죄에서도 특별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강요 유형에서도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
- 이는 체포·감금 범죄에서도 특별가중요소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강요 유형에서도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가.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를 추출함

▣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 기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중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나, 유사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음

나.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행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특별감경요소(행위자/기타) 및 일반감경·가중요소(행위 및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감경요소

- 절도, 강도, 횡령·배임 등 범죄의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에서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요소를 특별감경요소로 함이 타당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일반감경요소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도 양형기준은 경미한 폭행·협박을 일반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점유강취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므로 통상의 사례보다 경미한 사안은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계획적인 범행 ⇒ 양형인자 규정 ×

-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계획적인 범행’을 일반가중요소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2) 특별감경요소(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된다는 점,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이 가능함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 실무상 권리행사방해죄는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재차 담보 제공 또는 인도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할부금 또는 대출금을 이미 대부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경미한 사안이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고 있음
 - 강제집행면탈의 경우에도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낮아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사안 등이 존재함
 - 방화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

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양형인자 규정 ×**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의 경우 동기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안을 상정하기 어려움

3) 특별가중요소(행위)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실무상 재판절차를 악용하거나 허위의 권리양도 또는 채무부담 등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됨 ⇒ 가중 구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
-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횡령·배임, 사기, 공갈 등 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

-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양형기준은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반영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은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

- 침해행위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 설정 검토

- 긍정론 :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완성되는 위태범이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되고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성을 넘어 실제로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음
- 부정론 : 대상 범죄 분석 결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의 중대성을 양형인자로 반영한 다른 범죄군과 달리 실제 사례에 근거하여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정의하는 것이 곤란함
- 검토의견(긍정론) :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거나 심각한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채권 회수 실패로 인하여 받은 심각한

타격을 양형이유로 반영한 사례도 존재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협에 처한 경우(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2유형)

- 중강요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강요 유형과는 달리,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은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조)를 따로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중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영역에 포섭되도록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함이 타당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양형인자 규정 ×

- 권리행사방해 범죄유형은 본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복이나 원한관계, 범행 자체를 즐기는 경우 등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상정하기 어려움
- 실무상으로도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의 범행 내용은 다소 정형적이어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양형인자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VI. 집행유예 기준

1. 강요 유형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참작사유는 체포·감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함

■ 주요참작사유는 강요 유형의 양형인자표상의 양형요소와 유사 범죄군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양형기준을 참고함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참작사유는 강요 유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우발적인 범행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 주요 참작사유는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양형인자표상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강요 등 유형과의 통일성을 고려함